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의 기본방향

송 유 종

정보통신정책실 정책총괄과 사무관

WTO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각국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진전과 함께 21세기 고도정보사회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은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한 산업사회('70~80년대)는 물류유통망이 경제발전에 공헌했다면 고속정보사회('90년대 이후)에서는 정보통신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최근 중앙일보사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1세기에 대비해 투자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초고속정보통신망분야가 제1순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매년 세계의 산업동향을 예측·발표하는 세계개발보고서도 지식과 기술유통이 중시되는 지식집약형 경제구조하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수준을 판가름하는 정보통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이고 경제전반의 파급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전략산업이다.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규모는 '93년의 세계시장규모가 1조 \$ 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고속성장하여

21세기 초반에는 자동차산업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산업이 142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8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같이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문의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산업계의 경우는 기술발전 추세와 함께 유선과 무선이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방송사와 통신사업자가 상호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일례로 미국의 경우는 장거리통신사업자인 AT&T는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위해 McCaw Cellular사를 매수하였으며 지역전화회사(ROBC)는 CATV회사의 매수를 추진하는 등 미디어간의 합종연행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경우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략산업으로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고속도로사업"을 교육·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개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광케이블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신·방송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을 허용하고 세계와 금융을 지원하는 등 각종 투자촉진시책을 추진중이며 최근에는 자국 정보통신산업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적

정보고속도로(GII)구축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은 21세기 고속정보사회에 대비한 신사회간접자본으로서 “차세대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도정보통신사업촉진본부」를 구성하였으며 거품경제 붕괴 이후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광케이블망을 이용한 첨단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무이자 용자제를 도입·시행 등 각종 투자촉진시책을 추진중이고 「관서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정보통신의 선진국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미래정보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종합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며 국가, 사회 및 산업의 정보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5년까지 구축하여 정보통신의 하부구조를 고속화하고 산업전반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 연구소, 주요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선도집단을 위한 「초고속국가통신망」을 공공재원으로 구축하고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공중통신망」은 「초고속국가통신망」의 운용성과와 개발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재원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초고속국가통신망은 제 1단계인 '97년까지 주요기관 및 주요도시간을 광케이블망으로 구축하여 행정전산망등을 수용하고 2단계인 2002년에는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고속영상서비스를 제공하며 3단계인 2010년까지는 초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초고속공중통신망은 대량의 정보수요가 밀집된 업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2015년까지는 일반 가정에도 연결되는 광케이블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에 활용될 다양한 멀티미디어정보와 핵심통신망기술 및 응용기술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여 낙후된 국내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대덕연구단지간에 선도시험망을 구축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을 연결하여 초고속통신서비스와 기술의 개발 및 시험에 활용토록 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개발된 서비스와 기술은 초고속국가통신망에 우선 적용한 후 확산·보급토록 할 예정이며 미래 첨단서비스의 조기 가시화로 일반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정보화시범지역으로 선정, 전지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영상전화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정책 및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에 설치하였으며 8월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 체신부,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체신부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주무부처에는 「전담반」을 설치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분야별 이용활성화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는 총 44조 8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인데 초고속국가통신망 구축비(9천억원)는 정부재정,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 배당금등의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초고속공중통신망(42.1조원)은 통신사업자재원으로 구축하며 기술개발비(1.8조원)는 정부재정과 통신사업자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둘째 통신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

확이다. 지난 '90년초에는 그간 공기업에 의해 독점체형태로 경영해 오던 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부가통신사업과 국제전화 및 무선호출분야에는 이미 경쟁이 도입되어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급성장하는 등 경쟁의 성과를 어느정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부문별로 사업자수를 법에서 일일이 규정하고 요금결정에 대하여 정부가 과도하게 간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효과는 다소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영역 또한 일반과 특정통신사업으로 구분, 상호병영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업자가 기술발전과 서비스융합화 추이에 맞추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유선)과 특정(무선)사업자간의 구분을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일원화함으로써 능력있는 사업자는 기술추세에 따라 사업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 지분한도는 1/3로 통합조정되 전화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관계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기본통신분야에서는 기본통신다자간협상에 의한 대외개방 이전에 국내사업자간에 시외전화사업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에게는 보편적서비스 제공과 연구개발업무를 부과하고 원가에 근접하는 요금체계와 공동회계제도를 정립하는등 실질적인 유효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통신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인휴대통신사업자는 주파수 여건과 초기 투자비 부담을 감안하여 1개의 사업자를 우선 허가하고 점차 그 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통신사업자간에 실질적인 경쟁도입을 위해 사업종류에 따른 사업자수 제한과 사업자별 사업영역을 폐지하는 등 통신시장의 도입규제를 없애고 기반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정과 허가는 허가로 통합하며 부가통신사업은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금경쟁을 통한 효율성제고를 위해 경쟁도입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은 규제하되, 실질적으로 경쟁이 도입된 분야는 최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정보통신의 핵심기술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망분야의 경우는 차세대교환기(ATM) 및 10Gbps급의 광전송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디지털 다중전화장비(CDMA 방식)을 개발·공급하는 한편, 소형위성기지국장비와 디지털위성방송(DBS)용 장비를 개발하여 무궁화위성사업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컴퓨터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산주전산기Ⅲ(TICOMⅢ) 상용화를 완료하는 한편, 주전산기Ⅲ보다 20배의 성능을 갖는 고속병렬컴퓨터(TICOMⅣ) 개발에 착수하고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한글정보관리시스템(DBMS)등 첨단분야의 기술을 중점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지원을 위하여 금년중에 전국의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용컴퓨터 보급을 완료하고 주요대학에 국산주전산기의 지원을 확대하며 정보통신관련학과 신·증설대학에 대한 실형·실습기자재구입비와 우수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매출액 대비 기술투자비율을 현재의 5%에서 2000년까지는 10%로 확대하고 현재 3,500억원 수준인 정보통신진흥기금 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

하여 민간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로 정보통신기술개발협의회를 구성, 산·학·연간 협동연구를 활성화해 나가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공동연구와 표준화 활동도 강화하여 산업체의 국제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WTO 체제에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94. 5월부터 2년 시한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간통신다자간협상에 전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간통신 개방전략을 면밀히 분석, 적극 대처하고 개도국과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사업 국제화추진단」을 통해 개방대책 등 협상대응능력 강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한·미간 통신협의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통신기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등을 계속 협의하여 양국간 상호 교역 증진기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전자교환기(TDX) 등 국산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수출대상국과 정부차원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통신망 설계지원과 기술훈련을 제공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규모

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한 통신기기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하여는 우리 업체의 진출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현지 합작산업체인 전자교환기의 성능을 개량하여 중국통신망에 맞는 대형전자교환기의 공급확대를 추진하며 차세대교환기(ATM)의 양국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호남성 통신망건설사업, 북경-광주간 광케이블건설사업 등 통신망건설사업에 대한 참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상호 정보·기술·인력교류 등 한-일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과 민영화추진사업 등 개도국 통신사업에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각종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국제화·개방화·경쟁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산·학·연과의 협력체제를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감은 물론,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부문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경제」 기간동안 그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TTA

